

戰時作戰統制權의 返還問題 戰時作戰統制權의 歷史



金昌順

본지 발행인

1.

戰時 作戰統制權이 韓國에 返還되면 韓半島의 軍事정세, 정치정세 또는 東北아시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이 문제는 먼 앞날의 문제가 아니라 늦어도 2012년경이면 현실적 문제로 되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2.

戰時作戰統制權이 한국측으로부터 주한미군사령관에 移管된 것은 공산측의 6·25남침이 격화되었을 때 유엔군이 한국으로 來援하여 반격으로 공산침략군을 물리칠 때 한국군의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그후 1954년 韓美相互방위조약의 합의서(合意書)에서 최초 '指揮權' 이라고 썼던 것을 '作戰指揮權'으로 바꾸고 그것을 다시 1978년에 韓美

合同司令部를 만들때 駐韓美軍司令官이며, 유엔軍司令官이며, 韓美연합 군사령관인 미육군대장에게 作戰指揮權을 委任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후 1994년에 平時作戰統制權은 韓國에 返還되었다.

3.

돌이켜 생각하면 1953년 휴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화유지가 가능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反共民主국가로서 安保태세가 확고했던 것은 물론이러니와 이에 더하여 긴밀한 韓美연합군체제와 한국군 및 미국군의 연합군체제 유지에 충실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란 사실을 뱉 수 없다.

4.

盧武鉉대통령 시대에 이르러 작전통제권에 관한 문제가 表面化되었다. 이 작전통제권문제는 나라의 체면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사회의 사상 의식상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

1979년 全斗煥정권때 발생한 軍事쿠데타 곧 12·12事態로 作戰統制權問題가 붙어진 때가 있었다. 당시의 쿠데타 주도자들은 미국의 작전통제권을 무시하고 軍部隊를 任意로 이동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물론 쿠데타 세력에서는 “자기들의 국내 治安활동에 대하여 왜 미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의 독립국가 체면을 변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독립국가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작전통제권을 回收해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이같은 戰時作戰統制權 회수투쟁이 확대되면서 이 문제가 公式로 韓美安保協議에 등장한 것은 昨年(2005)이 처음이었다.

6.

今日(2006.11.5) 현재로 戰時作戰統制權의 한국 회수일이 결정된 것

은 없다. 다만 返還을 요구하는 한국에 대하여 미국 측이 “한국이 원한다면 일찍 반환할 수도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래 2009년 내지 2012년경으로 설왕설래되던 戰時作戰統制權 반환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7.

그런데 작전통제권이 반환되어 작전통제권 시대의 韓美연합군체제의 틀이 바뀌게 되면 이로 인한 不安定사태는 없을까. 좀 더 정리하여 말해 본다면 韓美연합의 작전계획에 의하여 현재의 부대배치와 군사적 態勢가 잡혀져 있을 것인데, 작전통제권이 반환되면 이에 따라 작전계획도 바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休戰協定の 틀 자체도 영향을 받게 될런지 모른다는 기우가 일본측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 기우의 속셈을 살펴보면 대충 이런 것 같다. 즉 휴전협정의 틀은 본디 미국군대를 中核으로하는 유엔군과 북한간에 있었던 관계상황인데 戰時作戰統制權 반환으로 미군이 사실상 빠지게 되면 휴전의 틀은 문제가 없을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이 戰時作戰統制權으로부터 벗어나는 行爲에 의하여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지 모른다는 건설적 의미의 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좀더 구체적 연구토론을 들어보아야 그 전모를 알게 될 것이지만. **北韓**

